

또 막힌 여수공항 확장... 걱정되는 박람회

# ‘몽당 활주로’ 때문에 국내잔치 전략하나

## 불과 400m 못 늘려 국제선 이착륙 못해 지역민들 “정부 박람회 의지 있나” 반발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사업이 정부의 반대 부딪히면서 2012년 세계 여수엑스포 성공개최에 ‘적신히’가 켜졌다.

엑스포가 열리는 3개월 동안 내외국인 800만명의 관광객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항공편의 중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필요성=여수공항은 길이 2.1km에 폭 45m의 활주로와 4만 1천800㎡의 계류장을 보유한 소규모 공항이다. 매주 34편의 국내선 항공편이 이용하고 있다. 여수공항은 활주로는 300인승 이상 국제선 항공기의 취항이 불가능하고 소형 국내선 항공기만이 겨우 이착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여수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정부에 줄기차게 활주로 확장을 건의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전에 기존 활주로 2.1km를 400m 더 늘린 2.5km로 연장하고, 계류장도 7천200㎡를 더 늘린 4만9천㎡로 확장에 국제공항 면모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으로 인한 항공수요 급증 등도 활주로 연장의 요인이 되고 있다.

◇외국 관광객 항공편 이용 불편=전남도와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엑스포가 열리는 2012년 5월12일~8월12일까지 3개월 동안 박람회를 찾은 전체 관광객을 8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이 745만명, 외국인이 55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일 최대 14만1천명이 박람회장 방문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항공편은 도로·철

도·해운 등과 함께 여수세계박람회장 접근성에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특히 박람회 기간 동안 일본·중국 등 단거리 외국 관광객이 전세기를 이용해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해야 한다.

만약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이 박람회 전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외국인 관광객은 무안국제공항과 김해·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 철도 또는 도로를 이용해 박람회장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된다.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해 무안~광양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여수까지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륙별 항공 접근성 분석결과 박람회 기간 중 ▲일본인 5만7천명 ▲중국·대만·홍콩 등 중화권 42만4천명 ▲미국·캐나다·호주 등 구미권이 7만4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55만5천명에 달하는 외국 관광객의 접근성을 위해서는 여수공항이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민 반증=정부의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지역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여수세계박람회를 국가사업으로 확정해놓고도 미온적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수상공회의소 관

계자는 “도대체 정부가 여수세계박람회를 밀어주는 하는 것이냐?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전남도는 정부가 여수공항 확장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라도 계속해서 예산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최근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항공 수요 증가 대비를 위해 2010년도 소요사업비 2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여수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부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불가방침을 밝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지난 2007년 2012엑스포 개최국 선정 실사를 위해 세계박람회 기구(BIE) 까르맹 실뱅 실사단장 등이 여수공항에 도착하고 있는 장면. (광주일보 자료사진)

### 독립기구 없고 단체장이 감사관 임면

## 지자체 감사 기능 마비

해남군 7급 공무원의 10억 원대 복지 급여 횡령사건 등 지방 공무원들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액의 국민의 '혈세'가 5년 동안 한 공무원의 지갑으로 아금아금 빠져나가는 동안 지자체 감사에 단 한차례도 적발되지 않는 등 지자체의 자체 감사기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독립 감사기구 없어=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남도 22개 자치단체 한 공무원은 “자체 감사를 하다가 단체장이나 조직의 미움을 사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공무원 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상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성 갖춘 독립 감사기구 필요=감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사가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지자체의 업무를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지자체에 있는 자체 감사 조직에 독립성을 부여하거나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해 제대로 된 내부 견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사기구의 장을 단체장이 임명하거나 독립적인 감사기구 장의 임기를 법으로 정해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방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지난 11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회계비리의 자체 감사기구의 부실한 운영에 체장이 임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 역할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감사해야 객관성 있는 감사가 되는데 자치단체장의 임명하는데다 순환인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국 초중고 인턴교사 2만여명 배정

### 정부 '교육 뉴딜' 추진

자격을 교육대와 사범대 졸업자는 물론이고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한 2급 교사자격을 소지자에게 주어진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책위원장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실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인턴을 우선 배정하도록 추경 예산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배정되는 인턴교사 수는 학교별로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또 교과교실제(수준별 이동 학습) 도입에 대비한 시설 구축과 일반 교실이나 화장실 등 노후 교사(校舍) 증·개축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턴교사 사업비를 포함해 이번 추경에서 모두 2조3천억 원을 배정해 줄 것을 재정부와 한나라당에 요청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 “한미 FTA 재협상도 추가협상도 없다” 김중훈 통상교섭본부장

김중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이 없다는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현재 상태로는 한미 FTA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 톤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의 발언에 대해 “공식입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대응할만한 사안

이 아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본부장은 “(커크 내정자의 발언은) 그동안 미국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나오던 얘기”라며 “재협상을 요구했다고 할만한 부분은 찾지 못했고 다만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성급하게 반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재협상이 열릴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김 본부장은 “그런 사정이 되면 그

때 가서 보겠지만 아직 가정을 전제로 걱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미측이) 불만스런 부분이 분명해지면 그때 가서 얘기를 들어보자”면서 “USTR 차원에서 한미 FTA의 내용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시간이 지나면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자동차와 쇠고기를 최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그는 “오랫동

안 한미 간에 통상문제를 다루면서 자동차 분야는 그간의 메뉴가 다 들어가 있다”면서 “충실히 이행하면 미국은 한국시장에 접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연령 제한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아직은 시장이 조심스러운 상황인 만큼 어떤 접근이 미국 이익에 부합할지 잘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협뉴스